

제5장 남북대화의 재개

제1절 남북당국대표회담 추진

1. 추진배경

1998년 3월 25~27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진행된 대북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에서 북한적십자회측은 우리 대한적십자사측에 비료 20만톤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대규모 비료지원은 적십자사의 능력 밖이므로 남북당국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북한측은 1998년 4월 4일 남북적십자 판문점 연락사무소간 전화통지문을 통해 “북과 남 사이의 비료문제 등 서로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부장(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단을 4월 11일 북경에 보내겠다”면서 우리측에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제의하였다.

이러한 북한측 제의에 대해 우리측은 “4월 6일 정세현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5명의 대표단을 내보내겠다”는 수락 통보와 함께 회담장소 만큼은 “판문점이나 한반도내 편리한 장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화통지문을 통해 전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4월 7일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회담장소를 여러모로 보아 종전(남북적십자 대표접촉)과 같이 북경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한다”면서 회담장소를 북경으로 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북한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북경을 회담장소로 수용하고, 뒤이어 남북쌍방간에 대표단 명단을 교환함으로써 남북당국대표회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 회담진행

가. 제1차 전체회의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 비료지원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당국대표회담은 1998년 4월 11~17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담은 전체회의 3회, 수석대표접촉 4회 등 7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1998년 4월 11일 개최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 우리측 정세현 수석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해 남과 북은 지난날의 대결과 반목의 관계를 청산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공동번영과 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자고 촉구하면서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측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산가족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면회소와 우편물교환소를 설치하고 고향이산가족의 개별방문·상봉 및 시범적 사업으로 고향방문단 교환을 실시하며, 쌍방 최고 당국자들이 지명하는 특사를 교환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전면 가동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정상 가동해야 하며, 북한측이 희망하는 비료는 남북간 협력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되 비료지원의 규모를 감안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측의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북한측 전금철 수석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해 “남측의 비료지원은 북남관계 개선의 첫걸음이 되며, 부대조건 없는 지원은 북남간의 화해, 단합도모, 북남대화의 새 장을 여는데 기여할 것”이며, 접촉의 의제는 비료문제를 비롯하여 서로 관심갖는 문제에 대해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먼저 비료문제를 토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비료 지원량은 50만톤으로 하고, 인도·인수와 관련한 실무절차 문제들은 1984년 수해물자 인도·인수의 경험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십자 구호물자 지원의 전례에 준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이 우리측은 이산가족, 특사교환,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와 비료문제를 병행 토의하자고 주장한 반면, 북한측은 비료지원문제를 우선 결정한 후 상호 관심사를 토의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였다.

나. 제2차 전체회의

1998년 4월 12일 개최된 제2차 전체회의에서 우리측은 비료지원문제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이산가족문제 및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 등 남북관계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토의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히고, 특히 1995년 쌀지원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일방적 지원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우리측이 제기한 남북관계 개선방안 문제를 토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비료가 지원될 경우 우리측이 제기한 문제들에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회의는 진전없이 종료되었다. 다만, 남북쌍방은 수석대표 접촉에서 이 문제를 협의키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다. 제1~2차 수석대표 접촉

남북쌍방은 2차례의 전체회의가 성과없이 끝남에 따라 1998년 4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2차례 수석대표 접촉을 가졌다.

접촉에서 우리측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과 연계시키지 않은 비료지원은 합의가 되더라도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집행할 수 없게 된다면서 북한측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비료를 조건부로 받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고, 비료가 지원되어야 우리측의 정책 전환을 믿을 수 있다고 함으로써, 2차례에 걸친 수석대표 접촉도 진전없이 끝나고 말았다.

라. 제3차 전체회의

1998년 4월 14일 개최된 제3차 전체회의에서 우리측은 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괄타결 방식의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① 4월 말까지 비료 3만톤을 북한측에 전달하고, 나머지는 5~6월에 전달한다.

- ②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원칙에 합의, 실무문제 협의를 위해 4월 25일 판문점에서 적십자 대표접촉을 진행한다.
- ③ 이산가족문제, 특사교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한다.
- ④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개최한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비료지원문제를 합의한 후 상호 관심사를 협의하자는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이산가족면회소문제는 적십자 단체간의 사항이므로 당국대표회담의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우리측이 제시한 수정안을 거부하였다.

마. 제3~4차 수석대표 접촉

1998년 4월 16일 개최된 제3차 수석대표 접촉은 북한측의 요구로 이루어졌다.

접촉에서 우리측은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호응을 촉구하는 한편,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을 4월 25일 판문점에서 개최하는 데 동의하면, 비료 20만톤 지원을 합의서에 명기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다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절충안으로 ① 한국측의 비료 30만톤 제공 ② 이산가족문제는 제6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에서 토의 ③ 상호 관심사 계속 토의 ④ 제2차 남북당국대표회담 4월 29일 북경 개최 등을 주장함으로써 협의가 진전되지 못하였다.

또한 4월 17일 열린 제4차 수석대표 접촉에서도 북한측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여 주장하고, 특히 우리측의 대북정책과 대화자세를 시비하면서 수석대표 접촉은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상 회담중단 선언을 함으로써, 3년 9개월만에 재개된 남북당국간회담은 결실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와 같이 북한측이 남북당국대표회담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협상보다는 무조건·일방적인 지원만을 고집함으로써, 모처럼 재개된 당국간 대화의 분위기를 이어 나갈 수 없게 되었으나,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상호주의’ 원칙을 북한측에 분명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제2절 대북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1. 진행경과

1995년 8월 북한은 이례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큰 홍수피해가 발생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유엔에 긴급구호 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1995년 9월 이후 WFP(국제식량기구), UNICEF(유엔아동기금)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차원에

서의 대북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창구로 하여 북한동포돕기에 나섰다.

그러나 우리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사정이 악화되어 감에 따라 정부는 1997년 3월 31일 대북지원 품목과 참여범위 확대조치를 내려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였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강영훈 총재는 1997년 4월 18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해 북한측에 보내고 있는 지원물품을 보다 신속·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한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적십자간 대표접촉을 4월 29일 판문점에서 갖자고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4월 19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접촉 장소는 중국 북경으로 하고, 접촉 날짜는 5월 3일로 하자고 수정 제의하였다.

우리측은 북한동포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인도적인 측면에서 북한측의 수정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대북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남북적십자간 대표접촉이 1997년 5월부터 12월 사이에 중국 북경에서 4차례 개최되었다.

제1차 대표접촉(쥬97.5.3~5)에서 북한적십자회(북적)측은 지원식량과 물품의 전달절차 문제에 대한 토의에 들어가기 전에 구체적인 지원물량과 지원시기 등을 우리측이 먼저 밝혀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한적)측은 대북구호물자 지원은 민간단체들의 성금과 물품들이 모아지는 대로 북한에 보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느 만큼의 양을 보내겠다고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하고, 절차문제에 대해 우선 토의하자고 주장함으로써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제2차 대표접촉(쥬97.5.23~26)에서 남북한 양측은 대북구호물자 규모를 옥수수 기준으로 5만 톤 정도로 하고 품종은 옥수수를 위주로 하여 밀가루, 라면, 분유, 식용유 등으로 하며 1997년 7월 말까지 인도·인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제3차 대표접촉(쥬97.7.23~25)에서 양측은 2차분 대북구호물자의 규모를 옥수수 기준으로 5만 톤 정도로 하고 품종은 옥수수 등 식량을 위주로 하며 1997년 9월 말까지 인도·인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2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와 「양해사항」을 채택하였다.

제4차 대표접촉(쥬97.12.22~25)에서 한적측은 제2차 지원과 관련 북적측이 합의서를 통해 약속한 대북구호물자 전달에 대한 분배결과 확인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대북지원 분위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분배결과 확인에 대한 북적측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적측은 분배투명성 보장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제2차 지원 합의서의 ‘국제적십자사연맹 대표의 분배결과 확인’ 합의는 백용호 전서기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오히려 종전보다 후퇴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다음 회담 날짜도 정하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2. 제5차 접촉

북적측은 1998년 3월 2일 중앙통신을 통해 3월 중순이면 식량재고량이 떨어진다면 또다시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호소하는 한편, 3월 11일에는 제3차 대북구호물자 지원을 위한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을 갖자고 제의하였다.

한적측이 이같은 북적측의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이 1998년 3월 25~27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접촉에서 북적측 수석대표는 제3차 지원과 관련한 기본입장을 밝히면서, 지원사업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이념에서 동포 형제를 돕는 민족내부의 협력사업인 만큼 어떠한 사심도 전제조건도 없어야 하며, 새롭게 진행하는 지원사업은 동족을 돕고 민족적 유대로 이어가는 데 좋은 일이 되도록 지원을 받는 측에 부대조건과 부담스러운 일이 없어야 하고, 새로운 지원사업은 변화되는 현실적 여건에 맞게 새로운 변모를 보여주는 방향에서 보다 발전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이번 접촉에서 식량문제와 비료지원문제를 협의·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한적측 수석대표는 「국민의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과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한적의 대북지원은 순수한 민간차원의 지원이기 때문에 민간기증단체들의 분배결과 확인요청을 합의서에 담아야 함을 설명하고, 대북지원물자 전달절차 합의서(안)을 제시하고 협의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적측은 한적측에 새정부가 출범한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게 새로운 차원에서 1~2차분 지원을 영(零)으로 하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적측은 북적측의 새합의서 작성 주장에 대해, 적십자 활동은 정치와 이념을 떠나 인도적 차원에서 하게 되어있는 만큼,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동안의 합의서를 무시하고 새로이 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십자 원칙에 모순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접촉은 제4차 접촉의 연장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면서 한적측은 제3차 지원품목은 국내산 밀가루를 위주로 하여 1, 2차 지원규모와 같은 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적측은 지원규모를 10만톤으로 생각하고 나왔으며, 지원량과 품목을 늘려 줄 것과 추가로 비료 20만톤 지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적측은 그와 같은 대규모 비료지원은 적십자사의 능력 밖이므로 남북당국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쌍방은 제3차 대북구호물자의 지원규모, 품목, 지원기간, 전달경로 추가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분배결과 확인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적측이 종전대로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의 현지 대표가 분배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 북적측이 계속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수석대표 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수석대표 접촉에서 쌍방은 IFRC의 분배결과 확인을 합의서에 명기하지 않는 대신 ‘양해사항’으로 처리하기로 절충, 기존 한적측 안대로 합의하고 그 밖에 의견접근을 보았던 지원규모, 품목, 지원기간, 인도·인수지점 등에 대체적인 합의를 이룸으로써, 3월 27일 전체회의에서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제3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추진

1. 진행경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북간의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특히 1996년 들어 북한은 대미 잠정협정 체결을 제의한 후 비무장지대의 유지·관리에 관한 임무의 포기를 선언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정전체제의 근본을 와해시킴으로써 한반도의 불안정 상황을 심화시켰다.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협정 파기행위 및 대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이 대화에 응해올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6년 4월 16일 제주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양국정상이 진지하게 논의하여 「한·미 공동발표문」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남북한 및 미·중이 참여하는 4자회담 개최를 제의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을 제의한 이후 공동설명회(췑97.

3.5), 공동설명회 후속협 의(췑97.4.16~21), 차관보급 3자협 의(췑97.

6.30), 예비회담 3회(1차: 췑97.8.5~7, 2차: 췑97.9.18, 3차: 췑97.

11.21) 등 예비과정을 거쳐 1997년 말 비로소 4자회담이 개최되었다.

제1차 4자회담(췑97.12.9~10)에서 한국측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남북의 주도와 관련국의 뒷받침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남북당사자 원칙 존중,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 강구, 「남북기본합 의서」와 「군사정전협정」 등 기존합 의의 준수·이행, 평화체제 구축 및 긴장완화 조치의 단계별 협 의·이행, 회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과위 구성 등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5개항의 기본틀을 제시하였다.

북한측은 한반도의 평화보장체제 수립과 긴장완화 및 신뢰조성을 위해서는 4자회담에서 미·북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 기존입장을 계속 고수하였다.

미국측은 4자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 그리고 4자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그 과정에서 정전협정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반도의 긴장완화 문제와 관련, 이미 합의된 「남북기본합 의서」상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북한측의 주장에 대해 주한미군의 존재이유가 북한의 안보위협 때문이라고 반박하였다.

한편, 중국측은 4자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남북간의 관계개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1차 4자회담에서 4자는 제2차 4자회담 준비를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개최(췑98.2 중순, 북경)한다는 데에 합의하고 차기 의장국 순서를 결정, 그 결과를 의장성명(췑97.12.10)으로 발표하였다.

2. 제2차 4자회담

제1차 4자회담에서 북한측은 제2차 4자회담 개최 준비를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1998년 2월

중순 북경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정식 취임하기 전에 회담을 갖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한국측 정치일정과 연계시켜 특별소위원회 개최를 1998년 1월에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

이에 대해 한·미 양측은 국제관례를 무시한 처사라며 예정대로 특별소위원회 개최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고 특별소위원회 취소에 대해 공식설명을 요구함으로써 1998년 2월 6일 4자 실무협의회가 개최되었고, 여기서 제2차 4자회담 개최전에 준비회의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로 인해 제네바에서 개최된 준비회의(중98.3.14)에서 한·미 양측은 제1차 4자회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2개 분과위 구성문제와 관련, 이미 합의된 의제에 따라 ‘평화체제 구축’, ‘긴장완화·신뢰구축’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2개 분과위가 우선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분과위 구성에 앞서 주한미군 철수 등과 같은 세부의제가 우선 채택되어야 한다는 종전입장을 되풀이 함으로써, 각측 대표단은 이 문제를 제2차 4자회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북한측이 좌석배치와 관련하여 의장국(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가 알파벳 순으로 앉아야 된다고 주장,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의장국인 중국측이 한국측에 융통성을 보여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고, 한국측은 국제관례에 맞지 않으나 절차문제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으며 좌석배치 문제가 아무런 정치적 함의가 없음을 전제로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제2차 4자회담이 개막될 수 있었다.

제2차 4자회담은 1998년 3월 16~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의장국인 중국측의 사회로 비공개로 개최되었다.

1일째 회의에서 한국측 송영식 수석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해 4자회담과 남북대화는 병행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 체제가 준수되고 남북기본합의서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4자회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평화체제 분과위원회,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분과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 김계관 수석대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장애가 된다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분과위 구성에 앞서 세부의제를 먼저 확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측은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장기적 과정이 필요하나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은 즉각적인 진전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우선적이고 손쉬운 조치들에 대해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측은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의 필요성과 그 과정이 장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데 4자가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회담의 주요 과업은 ‘분과위’ 등 조직과 형식의 확정 및 이와 관련된 문제의 논의라고 피력하였다.

2일째 회의에서 한국측은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이 주도해야 함을 역설하고, 4자회담 진전을 위해 조속히 분과위 설치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우선 논의할 것과 분과위 구성은 세부의제가 확정된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미국측은 북한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것이기 때문에 4자회담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으며, 미·북 평화협정 체결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반도 평화유지 실제당사자는 남·북한이기 때문에 미국측은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상정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측도 분과위 설치와 관련, 한·미측의 분과위 설치 제안을 우선 논의하자는 데 동의하였다.

3~4일째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각 분과위에서 논의할 ‘논의방향’을 제시하며 분과위원회 설치·운영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분과위 설치에는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 미·북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세부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하였다.

5~6일째 회의에서도 북한측은 본국으로부터 기존입장을 고수하라는 훈령을 받았으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아 회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결국 4자는 차기회담 날짜도 정하지 못한 채 제2차 4자회담 회의진행 과정을 밝히는 「4자회담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회담을 끝마쳤다.

3. 제3차 4자회담

우리정부는 1998년 8월 초 하와이에서 한·미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1998년 3월 이후 중단 상태에 있는 4자회담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이러한 한·미간 협의를 바탕으로 1998년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뉴욕에서 열린 미·북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지하핵의혹시설 규명 문제 등 현안 문제를 포함하여 제3차 4자회담을 10월중 개최하기로 잠정적인 합의를 보았다.

이에 따라 1998년 9월 25일 뉴욕에서 4자간 실무협의를 갖고 제3차 4자회담을 10월 21~25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한다는 데 최종 합의하였다. 이로써 남북한 및 미국·중국에 참여하는 제3차 4자회담이 1998년 10월 21~2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1일째 회의에서 한국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4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보장하기 위해 효율적인 회담조직과 회담운영 방안에 관한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합의가 이번 회담에서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본회담 의제를 심층 토의하기 위한 ‘평화체제’, ‘긴장완화’ 분과위 구성,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의 설치 등 군사적 신뢰구축에 관한 합의, 4자회담의 정례적 개최 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북한측은 4자회담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미·북간의 심각한 입장 차이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미·북 평화협정 체결 등 기존주장을 되풀이함과 아울러 한반도 내 군사장비 반입문제,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지문제 등을 추가의제로 제시하고, 군사적 신뢰구축보다 정치적 신뢰구축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측은 북한측이 합의를 번복하고 절차문제를 구실로 회담진전에 난관을 조성한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그동안 미국이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회담 진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 목적도 없이 회의만 계속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내보였다.

중국측은 1, 2차 4자회담을 통해 각측이 4자회담의 목적을 재확인하고 조속한 분과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공동인식에 도달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각국의 의견 차이가 다소 있더라도 허심탄회하고 융통성있는 태도로 회담진전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일째 회의부터 한·미 양측은 2개 분과위를 구성하고 각 분과위의 명칭은 ‘평화체제’, ‘긴장완화’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2개 분과위 구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분과위 명칭을 부여하는 데에는 반대하였다.

한국측은 분과위 개최시기와 관련하여 회담기간중 뿐만 아니라 본회담과 본회담 사이에도 개최하며, 이번 회담기간 중 분과위를 1차례 개최할 것을 주장하였다. 북한측은 분과위를 본회담 기간중에만 개최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이번 회담에서 분과위를 개최하는 것은 준비가 안되어 곤란하다면서 반대하였다.

한·미 양측은 2개 분과위에서 다루고자 하는 세부의제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측은 평화협정이 미·북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 종래입장을 되풀이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측은 본회담을 3개월에 1차례 정도로 정례화하고 제4차 4자회담을 1999년 1월 18~22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회담 정례화를 명시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4자는 ‘평화체제 구축’ 및 ‘긴장완화’ 문제를 각각 논의하기 위한 2개 분과위 구성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언론발표문」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제4차 4자회담부터는 분과위에서의 실질적인 작업을 개시하기로 하는 「분과위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서」를 채택하는 한편, 제4차 4자회담을 1999년 1월 18~22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기로 합의하였다.

4자가 합의한 「공동언론발표문」과 「분과위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서」의 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